



## 스스로 태풍속에 갇힌 한국낙농호(號), 신중하고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목 수생(剛木水生)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중략>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주마. 우지마라 내 새끼야”

심청가 중 일부부분이다.

배고파 우는 청이를 안고 젖동냥 다니는 심봉사의 절박한 모습에서 제 나라 국민들 먹을 우유조차 자급하지 못해 남의 나라로부터 사서 먹는 딱함이 연상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상상일까? 우유는 자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할 기초식량이다. 그러나 그 우유가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유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그 생산이 제한되고 있어 수급불균형 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끊임없이 선진국의 성장모습을 좇고 있지만 기초식량인 우유마저 제대로 자급하지 못해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국가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동안 이어져온 낙농산업에 대한 불안심리는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뼈저린 UR 협상의 실패와 일관되지 못한 정부농정에 대한 불신 등이 바로 그것이다.

UR협상 이후 발생된 유제품 수입개방에 모자라 아직 DDA 협상을 비롯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난제를 제외한 국내 낙농산업 내부의 문제만을 놓고 봤을 때 근본적인 정부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여전히 집유체계 개편문제만으로도 그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상들인 정부-낙농가-유업체간의 의견차가 그 원인이겠지만 이는 우리 낙농가들의 입장에서 생산자인 낙농가의 현실과 정서가 무시된 채 예단된 정부의 대책과 이윤추구만을 강조하는 유업체의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많은 낙농가들이 구체적인 비전제시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농림부(시안)부터가 농가의 쿼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좋은 날들은 다 갔다 여기고 있다. 농림부(시안)에 따라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된다면 거래교섭력이 미약한 집유조합을 비롯한 개인농가들로서는 유업체의 쿼터삭감이나 원유가 인하조정 등에 대응할 길이 없다는 점에 대해 또다시 낙농진흥회 설립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낙농산업과 그 산물인 우유라는 상품적 특성과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천편일률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현재의 복잡한 낙농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지금까지의 낙농산업을 유지케한 기반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꼴일 것이다. 우리가 추구한다는 낙농선진국들도 이미 원유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다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한 이들 국가들의 원유수급정책을 살펴보면 시유의 소비확대와 공급안정을 통한 가격 및 물량 조절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주요 정책 사업평가(04.8) 중 원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내용들이다. 이들 낙농선진국들이 자국의 낙농산업에 시장경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은 우유 및 낙농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유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식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산업에 대한 국가적 철학은 고사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참고로 삼아야 할 기본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위기에는 유업체들도 공히 기여(?)하였다. 특히 유업체 - 낙농가 공동운명체 의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유업체들은 시유소비 시장을 확대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기보다 여러방면을 통해 이속을 챙기기 혈안이다. 시유수요 감소를 운운하면서 최근 일부 유업체에서는 연초부터 자사농가들의 쿼터를 삭감하여 반값짜리로 구입하는 초과원유 물량을 더 늘리기까지 했다. 또한 항시 분유재고 상황을 이유로 농가들에게만 수급불균형의 책임을 돌리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법적인 혼합분유 수입에는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다. 그나마 장벽을 유지하였던 전지·탈지분유의 관세도 DDA, FTA가 타결로 무너지게 되어 마구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아쉬울 것 없는 유업체들로서는 해마다 유업체 계약물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자사농가들에게도 현재보다 더한 횡포를 부담없이 부릴 것이다. 다시말해 수입개방을 앞둔 지금, 집유체계 직결전환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 앞에서는 지역,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낙농가가 예외일 수 없다.

이렇듯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서로 맞물려 전개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키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일방적 피해의 대상은 낙농가였다. 이제는 낙농·유업의 대등한 협력체계 설정을 위해 생산자 보드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지난 날의 실패를 거울삼아 전국단위의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하에 생산자 보드의 설립에 대한 원칙과 각 주체별 제도 참여방안 등에 대해 검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㉞